여수시 '해양' 주제 국제영화제 만든다

2012세계박람회 유치 후보지인 여수시가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를 만든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22일 삼산면 사무소에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2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인 만큼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영화제의 타당성을 검토, 최근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미 문화관광부에 문의, 국비 지원 등 상당 부분까지 협의를 마쳤다"며 "'해양'이란 주제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영화라는 매체를 잘 활용한다면 박람회 성공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화제는 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 기념사업 차원에서 매년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지역출신 유명 영화 감독들과 배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를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참여정부 4년, 나라 빚 150조 늘어"

작년말 국가채무 283兆…GDP 대비 33.4%

양극화 개선 미흡, 서민경제·고용개선도 부진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4년간 국가채무가 약 15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분배가 악화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개선도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를 통해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가 283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49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2002년 말 19.5%에서 작년 말에는 33.4%로 높아졌다. 국가채무의 급증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데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2005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4개국 정도며 채무내용 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국민이 세금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GDP 대비 12.5%인 100조9천억원인데다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도 147조1천억원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이뤄졌던 작년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으나 올해 이후에는 점차 낮아져 오는 2010년에는 31.1%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이어 참여정부 4년 간 거시경제의 성과는 양호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이 2003년 1.9%에서 2004년에는 3.9%로 높아졌다가 2005년 0.5%로 다시 급락했고 작년 3·4분기까지는 1.9%에 그치는 등 국내총생산(GDP)과의 괴리가 지속하면서 서민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이어졌다.

특히 공급과잉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개선이 정체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가계부채도 지난해 9월 말 현재 558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2005년 이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보통신(IT)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기업 채산성 악화에 다른 신규채용 기피 등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 설

광주연극계 내분 '예향'이 부끄럽다

광주연극계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공연 관련 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가 하면 연극협회 운영을 놓고 연극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극인들의 내분은 지역 연극계 발전을 저해하고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광주 연극계의 내분과 갈등은 지난해 말 연극협회장 선거와 올 1월 광주예총 회장 선거를 잇달아 치르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협회 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젊은 연극인과 전·현직 회장단을 비롯한 중·장년 연극인들이 서로 협회장 후보를 내세우며 양측 간에 틈이 벌어졌고, 예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광주의 한 극단 대표가 문예진흥기금과 무대예술지원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작품 선정 및 기금 집행에 대한 공정성 및 도덕성 문제마저 불거져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양상이다.

광주 연극계의 토양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럼에도, 지역 연극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 연극인들의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었다. 연극인들의 헌신이 오늘의 광주 연극계를 키워왔다는 얘기다.

지역 연극인의 내분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선배 연극인들이 어렵게 지켜온 광주 연극문화를 파탄에 몰아 넣을 수도 있다.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다면 공정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바로 잡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편을 갈라 서로 헐뜯고 네 탓만 해서는 광주 연극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광주 연극계가 하루 빨리 내분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연극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기 바란다.

참여정부 4년의 초라한 '경제성적표'

재정경제부가 23일 발표한 참여정부 4년의 '경제성적표'는 한마디로 초라하다. 수출 등 일부 지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론 낙제점이었다.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는 커졌으나 실업과 양극화 심화 등 민생은 엉망이었다.

지난 4년동안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4.2%였다. 성장을 주도한 것은 연평균 1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수출이었다. 정부가 단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잠재성장률을 넘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질총소득 증가율은 0.5~3.9%에 그친 '알맹이 없는 성장'이었다.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이 위축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의 핵심인 건설경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투자는 2004년과 2005년 각각 1.1%, 0.4% 늘어나는데 그쳤고, 작년에는 0.1% 줄어들었다.

청년실업의 증가와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도 실패한 정책의 결과다. 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로 부상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2003년 이후 최대에 달할 만큼 실업은 심각하다. 12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도 뼈아픈 실책이다.

정부는 경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남은 1년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의 회복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예능·체육 과목군 필수

2012년부터, 고교 선택과목군 6개로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도덕·사회, 수학·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국어·도덕·사회 ▲수학·과학·기술·가정 ▲체육 ▲음악·미술 ▲외국어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개정안에는 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으로 학교급별로 자율 수업시간을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초등 1, 2학년 제외)하되 초등학교와 고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학년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광주 기독교協 "사립학교법 재개정하라" 광주광역시 기독교협의회 대표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크 로비' 혐의 박동선씨 징역 5년형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으로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피소됐던 박동선(72)씨가 22일 미 법원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니 친 뉴욕법원 판사는 앞서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최소한 20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피소됐던 박씨에게 지난해 7월 13일 유죄평결을 내린지 7개월여만인 이날 징역 5년형을 공식 선고했다.

지난 1월 멕시코에서 추방된 뒤 휴스턴을 거쳐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는 유엔을 상대로 석유-식량 계획 추진 과정에서 이라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유엔 관리에게 전달한 혐의로 피소됐었다.

/워싱턴=연합뉴스

/ 신임 광주 고검·지검장, 차장 프로필 /

균형 감각·신망 두터운 덕장

명 동 성 광주고검장 균형감각을 갖춘 온화한 성품으로 부하직원들에게는 물론 검찰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 기아그룹 비리 사건, 이신행 의원 비리사건을 무난히 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1998년 서울지검 특수3부장 시절 농림부 간부들이 뇌물을 받으며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전산화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치기도 했다.

▲강진(54·사시20회) ▲서울대 법대 ▲대검 수사기획관 ▲인천지검 1차장 ▲서울동부지검장 ▲제주지검장 ▲광주지검장

특수부장 2회 역임한 수사통

신 상 규 광주지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특수부장을 2차례 역임하고, 대검 중수부 2과장을 거치는 등 전형적인 수사검사 출신이다. 지난 97년 서울 남부지청 형사5부장 재직시 '북풍(北風) 공작사건'의 수사를 맡아 처리했다.

▲강원도 철원(57·사시21회) ▲경복고 ▲서울대 법대 ▲수원지검 검사 ▲대검 중수부 2과장 ▲서울지검 특수2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부산고검 차장 ▲창원지검장

기획·정책판단 뛰어난 학구파

안 창 호 광주고검 차장 학구적이고 정책판단 능력이 뛰어나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평이다.

대검 기획과와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몇 안 되는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49·사시 23회) ▲대전고 ▲서울대 사회대학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고검 검사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조정력 탁월…연수원 15기 선두주자

길 태 기 광주지검 차장 특수, 형사, 강력업무를 두루 거쳤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시 농산물 경매 비리 사범 50여명을 적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비리에 철퇴를 가하기도 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공보관을 맡아 검찰과 법무부간 내홍을 잘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사법연수원 15기 중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다.

▲서울(50·사시 25회) ▲대구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검 공판2부장 ▲법무부 공보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수억대 뇌물·공금횡령 '버젓이'

감사원, 설 전후 공직비리 적발

억대의 뇌물을 받거나 수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공직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달 8~21일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및 지자체 등 110여곳을 대상으로 '설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10여건의 뇌물수수 및 횡령 건을 포함해 수십건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공기업 직원은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B공기업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타낸 뒤 유용하다 적발됐다.

또 C 지자체 공무원은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

D 지자체의 경우 심야에 당직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돼 있는 야근자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고, 섬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6명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됐고, 특히 이중 일부는 60일 이상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靑 민정비서관에 오민수씨 차별시정위비서관 이숙진씨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민정비서관에 오민수(41) 행사기획비서관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에 이숙진(43)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학 교수를 내정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밝혔다.

오민수 비서관은 시사저널 기자출신으로 참여정부 들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행사기획비서관으로 일해왔고, 이숙진 비서관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행정관,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장상 대표 취임 절차 하자"

민주당원 3명 직무정지 신청

민주당 당원 송모(45)씨 등 3명은 23일 장 상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장 상 대표가 지난해 12월 공동 대표였던 한화갑 대표의 사퇴 이후 대표로 단독 등록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장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비민주적이고 일방통행식으로 당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이러지 말란 법도 없다

목포공항 '비행안전구역' 축소

2,300만평→250만평으로

민·군용 항공기지인 영암군 목포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천300만 평에서 250만 평으로 대폭 축소돼 인근 기업의 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목포공항은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예비기지'(비상활주로)로 분류됐다.

헬기전용작전기지나 예비기지는 수송기 등 비제트기(지원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보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등 규제가 가볍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목포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4㎞) 양끝을 기준으로 기존 총 34㎞에서 7.3㎞로 크게 줄어든다.

또 활주로 폭 기준으로도 7.5㎞에서 1.1㎞로 축소된다.

합참은 이에 따라 기존 비행안전구역이 2천300만 평에서 250만 평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목포공항을 헬기전용작전기지 겸 예비기지로 재분류함에 따라 목포공항 상공의 고도제한도 대폭 완화되게 됐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완화는 목포공항 주변에 있는 조선업체 현대삼호중공업의 '107m 골리앗 크레인 설치' 민원을 계기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임동욱기자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